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2
----------	------

발의연월일 : 2024. 7. 10.

발 의 자 : 이강일 · 김남근 · 박상혁
강준현 · 이연희 · 한정애
박수현 · 박범계 · 노종면
박민규 · 민병덕 · 복기왕
채현일 · 천준호 · 윤종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합병 등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예금자보호법」 부칙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7천억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법률 제1069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128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43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4년 8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p> <p>① (생 략)</p> <p>②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 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관하여 <u>2024년 8월 31일</u>까 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 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 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法律 第5492號 預 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 제30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 용례)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 -----.</p>